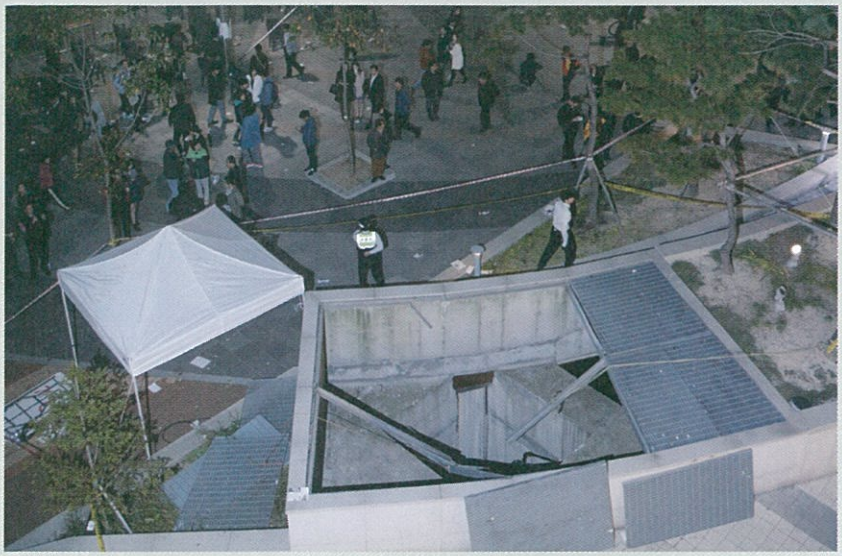
Safety Main News



지난달 17일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가 열리고 있던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덮개가 붕괴, 관람객 27명이 2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정부, 매년 2~4월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정부가 내년부터 매해 2~4월을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해 전국적인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안전신고 기능을 연계한 '안전신고 통합포털'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안전문제와 관련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 대진단 정책공유대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52차 회의', '안전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국민참여 확산대회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차관, 공공기관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행사에서 최근 추진 중인 '국가안전 대진단'에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안전신고 통합포털'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안전신고 통합포털을 구축하기 이전까지 '안전신문고'를 운영할 방침이다.

참고로 안전신문고는 지난 9월 30일 안전행정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별도의 메뉴로 설치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담당자가 실명으로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점검반이 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197억의 예비비를 투입해 위험저수지와 급경사지 등에 대한 노후시설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학교와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매해 2~4월 중에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에는 전국적인 일제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정부는 안전 대진단을 통해 도출된 안전 관련 정보들은 빅데이터 형태로 관리하고 시설, 제품, 서비스 분야 등의 불합리한 안전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까지는 '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서는 것은 물론 국민 각자는 '내가 곧 안전지킴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며 "일상생활에서부터 안전을 지키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판교서 환풍구 붕괴사고 발생, 27명 사상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행사 도중 환풍구 덮개가 붕괴돼 관람객들이 약 2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도 세월호 참사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태백선 열차 충돌 사고 등 대형사고와 동일하게 안전불감증에 기인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소한 공간에서 인기 그룹의 축하무대를 진행하면서도 사고가 난 환풍구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별도로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오후 5시 53분경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환풍구 덮개가 붕괴, 관람객 27명이 20m 아래로 추락했다. 공연을 보기 위해 관람객 30~40여 명이 한꺼번에 환풍구 덮개 위로 올라가면서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이로 인해 10월 21일 오후 5시 기준 16명이 숨지고, 11명이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 가운데 9명은 중상을 입어 사망자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지하 4층 주차장 환풍구를 통해 구조 활동을 펼쳤으며, 오후 7시 35분께 구조를 완료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최 측이 마련한 관람석(515석)이 모두 찼고,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관람객들이 환풍구 덮개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환풍구 주변에 관람객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가 난 환풍구는 높이가 낮아 건물 옆 계단을 통해 아동, 청소년도 손쉽게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경고문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

물론 사고 피해자들이 올라가지 말아야 할 곳에 올라갔다는 책임은 있지만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고,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분명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안전불감증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경무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은 환풍구 설비의 부실 시공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내년도 안전예산, 토목사업·시설보강에 집중

내년도 안전예산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의 신규투자나 계속사업에 편성됨에 따라 안전 환경을 강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안전사업 예산 327개 세부 사업목록'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안전예산을 올해 12조4000억 원에서 17.9% 증액한 14조6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감시네트워크에 따르면 내년도 안전예산은 안전사업의 확대나 인력 확충보다 대부분 SOC 신규투자나 계속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예로 안전예산 사업목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국토교통부 관련 안전예산에서는 도로유지보수 예산이 올해 3370억4200만 원에서 내년에는 4775억7400만 원으로 41.7% 증액됐다. 또 댐과 관련된 예산 12개는 3198억6000만 원에서 3833억7600만 원으로 19.9% 늘어났다.

예산감시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안전예산 사업 중 도로건설과 유지, 보수를 위한 증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토목사업과 시설보강만으로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서

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붕괴 사고, 싱크홀 문제 등 최근 잇따른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량진 수몰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로 2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담당공무원에게 경징계, 훈계, 주의 등의 처벌만 내리는 것에 그친 점도 지적됐다.

이들 사고 이후 서울시가 건설현장 50곳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460건의 부실이 적발했지만 이번에도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견책(2명), 훈계(7명), 주의(2명) 등의 처벌만 내린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받았다.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10~11월 서울시가 실시한 책임감리제 건설공사 감사 결과, 서울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라며 "감리업체는 월 3회 품질 및 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해야 하지만 지난 2010년 8월 이후 33개월간 참여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경징계 처분만 받았다는 것은 서울시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인천 남동산단 폐기물창고, 화재로 전소

지난 10월 16일 오후 1시25분경 인천 남동산업단지의 한 폐기물 창고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창고 300㎡와 폐기물을 퍼 나르던 포크레인 1대가 불에 탔다. 인천소방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화재발생 장소가 대형재해로 연결될 수 있는 공장 밀집지역 내 폐기물 창고인 점을 감안, 많은 인력과 장비를 즉각 투입해 30여 분 만에 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피해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중 매년 증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의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근로자한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해진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참고로 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3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0월 16일 밝혔다.

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는 859개소로 2012년 919개소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사망자 수 역시 같은 기간 975명에서 894명으로 줄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허나 실상을 세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원청과 하청업체의 안전수준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원청과 하청업체에서 각각 발생한 사업장 대비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05 : 1.09에서 △2013년 1.02 : 1.07로 증가했다.

또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음이 확인됐다. 중대재해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36.4%, 2013년 37.3%, 2014년 6월 현재 39.1%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와 함께 산재로 숨지는 간접고용 근

이영순 전 매경안전환경연구원장이 지난달 16일 안전보건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로자 비율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하청 근로자의 비율이 37.7%였는데 지난해엔 38.4%, 올해(6월 현재)는 39.7%로 늘었다.

중대재해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추락' 또는 '추락에 따른 협착이나 찔림'과 같은 고질적인 재해 유형이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 39.2% △2013년 42.2% △2014년 46.4%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 뒤는 끼임(단순 협착)이 차지했다. 끼임사고 역시 2012년 20.2%에서 2014년 23.5%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을 건설업(50.1~54.2%)이 차지했다. 제조업은 소폭 하락한 반면, 최근 규모가 커지는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지난해 15.1%에서 올해 20%로 상승했다.

은수미 의원은 "수년 동안 중대재해 발생 형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각종 산업안전 예방 대책들이 그만큼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현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한 간접고용 대책을 마련, 펼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순 신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취임

이영순 전 매경안전환경연구원장이 안전보건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16일 이영순 신임 이사장에 대한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영순 이사장은 앞으로 사회 곳곳에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이사장은 먼저 안전보건의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전보건을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주도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업주, 근로자,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실천해야 할 가치로 인식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당국 및 고객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이영순 이사장은 공단을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전보건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영순 이사장은 소통에 기반을 둔 조직문화를 조성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참고로 이영순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에서 화학공학 학사와 화학교육 석사, 명지대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한국안전학회 회장과 서울과학기술대 공과대학 학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어 안전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이영순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17년 10월까지다.